

##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 개혁 추진방안」의 내용과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요구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라. 퇴직자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35조제6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5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joons@korea.kr](mailto:jo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